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 글로벌 인재포럼 2013 개최
- 제5회 세계 선도대학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부산·광주

**국회 입법 동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432, 1907649, 1907651)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5,208명으로 확대

**고등교육 정책 토론 동향**

- 2013년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 글로벌 인재포럼 2013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교육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주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13」에 참여하였다.
  - 2006년에 창설된 이래 8회째를 맞게 된 이 포럼은 세계 각국정부,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대표, 대학총장 및 세계 석학 등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 올해에도 60여개 국가 150여명의 해외연사 및 참석자를 비롯하여 국내외 참가자 규모가 5천여명에 이르렀다.
- 11월 6일 개막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에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소개하며, ‘벽을 넘어 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서 학벌과 성별, 출신과 인종 등 모든 장벽을 허물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더욱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포럼에서 지혜와 성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럼의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5일(화)에는 3개 공동 주최기관장 및 주요 연사들이 참여하는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1월 6일(수)에는 에후드 바라크 前 이스라엘 총리가 “창조형 인재, 어떻게 키우나”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고, 이어진 기조 세션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거석 회장(전북대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지역대학 창조경제를 견인하다’를 주제로 대학의 산학연계 및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및 창조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 및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기조 세션과 병행한 특별 세션에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의 흥망 등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의 차세대 인재전략, 예술과 과학의 융합 등이 논의되었다. 11월 7일(목)에는 미래를 바꾸는 학교, 기업이 원하는 인재, 능력중심으로 가는 교육훈련, 창조인재 육성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16개 세션이 운영되었다. 교육부 세션에서는 행복한 미래인재로,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 미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100세 시대 평생학습 등을 주제로 “창조경제” 시대의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 이번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에후드 바라크 前 이스라엘 총리 외에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와 폴 톰슨 영국 왕립 예술대 총장을 비롯하여, 보스턴컨설팅 그룹, 구글, QB3, 보잉 등 글로벌 기업 및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전성철 세계경제연구원 회장, 노인석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좌장 및 연사로 참여하였다.

□ 아울러, 본 포럼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의 ‘EAP-GHR Workshop’을 비롯하여 포럼 참석자들에게 국내 대표적인 인재양성 기관을 방문·견학하여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투어도 개최되고,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교육생인 중고교생과 글로벌 기업 CEO 및 해외석학 등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 (글로벌인재코스)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

(창의인재코스) 한국예술종합학교 ⇒ SK텔레콤 티움 홍보관

\* KAIST, POSTECH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 제5회 세계 선도대학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 “한국 대학들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지만 현재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거석 회장(전북대 총장)은 11월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선도대학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서 회장은 발표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두뇌한국21(BK21) 사업,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등은 대학의 연구 활성화와 국제화에 기여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서 회장은 향후 한국 대학들이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SCI 논문 피인용 횟수 순위를 2011년 세계 30위에서 2019년에는 20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 회장은 또 “한국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 3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 상하이자오통대가 주최하고 톰슨로이터사가 후원한다. 오는 6일까지 세계 주요국 대학 총장, 연구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선진 국가들의 대학 정책을 공유하고 육성방안을 논의한다. (2013.11.5 한국대학신문 기사 인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 부산 · 광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은 11월 5일 부산 동의과학대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 대학의 총장과 정책 담당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였다.

-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 최석식 상지영서대학교 총장은 '전문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은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추진방안'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이승후 인천재능대 부총장, 손영환 대동대 교무처장, 문덕희 창원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손광락 영남대 교무처장, 조호현 부산외국어대 기획처장 등이 참가하였다
- 주제발표에 나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고 1차적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배 교수는 "이는 곧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대학원 부실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에서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학 전반(수도권/지방, 국립/사립, 일반/전문대학)에서 균형있게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석식 상지영서대 총장은 "전문대학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대학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2만8천800명)하고 정부 국경과제와 연계해 2017년까지 1만~2만명 정도 정원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고석규 목포대 총장은 "수도권의 관점에서 부족해 보이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며 "대학별 성격, 특성, 유형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해 상생과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승후 인천재능대 부총장, 손영환 대동대 교무처장, 문덕희 창원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손광락 영남대 교무처장, 조호현 부산외국어대 기획처장이 참석,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설명했다.
- 또한 11월 8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지역대학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의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이계철 군장대 기획관리처장은 "정부가 정원부족 해결과 등록금 반값 정책을 위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량지표만 가지고 무리하게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 이 처장은 "이로 인해 대학간-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증폭됐고, 대학들은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평가지표 향상에만 몰두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학구조 개혁방안 중 시장원리에 의한 퇴출합병 방안에 대해 "결국 지방대학만 어렵게 할 것이다"며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대학은 존립과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광성 광주교육대학교 기획처장은 "대학구조개혁안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고만 돼 있고 자세한 평가방식은 없다"며 "모든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이 평가방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또 "퇴출대학을 선정하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성평가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박성태 신안산대학교 기획홍보처장은 "대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을 3그룹 이상으로 세분화하면 대학간 서열을 조장하고, 그룹별로 적용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초학문 분야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시욱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은 "대다수 사립대학은 취업시장이나 기업채용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초학문보다는 실용학문 위주로 교육을 재편하고 있어 그로 인한 기초학문 분야가 취약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정 학문분야에 치우친 인력수급 불균형 발생을 막으려면 전국 대학 학과평가를 통해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해 자율적 정원감축 또는 통폐합 추진으로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와 호남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졌으며, 교육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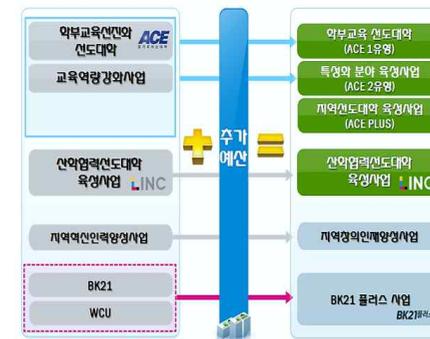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대학 육성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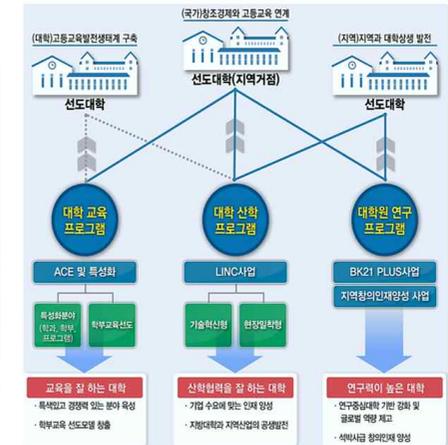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약 2,000억원 확보하여 5년간 총 1조원 수준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1월 4일(월)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난 8월 1일(목)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크게 달라진 사항없이 최종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 재편(안) >



<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성과모델 >



## 지방대학 육성 5대 중점 과제

## 1.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931억원, '14~'18)
-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

## 2.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주요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지방대 예산확대(약 800억), 연구지원 사업의(BK21 PLUS, 학술연구 지원 사업) 지방대 지원 비율 확대 등
  - ※ BK21 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중 : 24%(12) → 35%(13년)
  - ※ 학술연구 지원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중 확대 : 44%(13) → 50%(17년)

## 3.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대학(원) 지방대학(원)이 지역소재 고교(대학) 졸업자(예정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지역인재 전형제도)
- (공무원) 지방대학 졸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적용
- (공공기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 추진

## 4.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 직업교육 프로그램, 인문·예술 강좌, 노인층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방대학 시설·인적자원 지역사회 개방, 지역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

## 5.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전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금년 내 제정으로 안정적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

- '14년 주요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800억원이 늘어나 지방대학에 총 4,500억원 수준이 지원될 전망이다.
  -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주요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1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0억원이 증액되어 1,931억원이 투자되며, 5년간 총 1조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되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더불어, 연구지원에 있어서도 BK21 PLUS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을 '13년 24%에서 '14년 35%로 이미 증가시켰으며, 향후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17년까지 50%로 증액('12년 44%) 시켜나갈 계획이다.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하여 설계되며('14~'18),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 지원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 부처들이 추진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 특성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대학내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 배정되어 있고(대학내 비교 우위), 타대학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 특성화 사업인 만큼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편, 재정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 국공·사립의 구분 여부, 권역 및 대학 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 및 방법, 한 학교당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안)을 오는 11월중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졸

업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한다.
- 향후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균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의 진정한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5,208명으로 확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예정자 717명을 선발(2013. 10. 18. 기준)하였다고 밝혔다.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선발 확대는 새 정부 들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 이번 추가 선발·배치에 따라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5,208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 \* 5,208명 = (2014년 선발자 717명) + (2013년 10월까지 실 발령자 4,492명)
  - 2014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94.5%(중학교 93.2%, 고등학교 96.2%, 순화·겸임교사 포함)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진로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 ※ 전체 중·고교수 : 5,520개교(중학 3,190개교, 고교 2,330개교)
    -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교 : 5,215개교(중학 2,973개교, 고교 2,242개교)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시도별 선발 결과를 보면 서울 35, 부산 12, 대구 16, 인천 31, 광주 8, 대전 30, 울산 6, 세종 7, 경기 89, 강원 60, 충북 56, 충남 63, 전북 0, 전남 89, 경북 157, 경남 48, 제주 9명을 선발하였다.
- 특히,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음에도 경북교육청은 157명을 선발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 반면, 전북교육청은 2013년 5명 선발에 이어 2014년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전혀 선발·배치(2013. 10. 18. 기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진로교사 배치율(26.1%)을 기록하게 되었다.
    - ※ 전국 평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 94.5%(순화·겸임 교사 포함)

-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연수대상자) 선발은 전국적으로 3.6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각 시·도별로 10년 이상 교직 경력을 가진 중·고교 교사 중에서 진로지도 경력, 진로연수 경력, 부장 경력, 담임 경력,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선발하였다.
  - ※ 선발 경쟁률 : 서울 3.6:1, 부산 5.9:1, 대구 4.5:1, 광주 10.5:1, 경기 7.5:1, 충남 2.5:1, 전남 3.1:1, 경북 3.8:1, 경남 3.4:1 등
-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등·계 방학 중 합숙연수, 학기 중 연수, 하계 방학 중 집합연수 등 8개월에 걸쳐 총 570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내년 3월에 가배치, 9월부터는 정식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은 학교의 진로진학업무를 총괄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로서,
  - 2011.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수업 등을 하는 교과교사인데,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주요 직무 〉

- ①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②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 ③ 진로·진학 관련 학생 상담 및 지도
- ④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
- ⑥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중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 및 취업 지원,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특성화고)
- ⑦ 커리어넷 등의 진로직업 관련 심리검사의 활용 및 컨설팅
- ⑧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 ⑨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등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 확대를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 강화되며,
  - 아울러, 전국 대부분의 중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입법 동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32)

###### ○ 발의자 및 발의일자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1.1)

(강석호, 김무성, 김을동, 김태원, 안효대, 이명수, 이상일, 이종진, 이현승, 정희수)

###### ○ 입법내용

교육부장관이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의 폐지, 학과정설 또는 학생 정원의 증가에 관하여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설립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49)

###### ○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7)

( 강창일 김성곤 김재운 배기운 부좌현 원혜영 윤관석 윤호중 조성식 주승용 )

###### ○ 입법내용

- 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가 받는 등록금에 입학금 및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함으로써 등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 나. 학생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추천한 학생이 되며, 그 정수는 교직원 위원과 동수로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은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 라. 입학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51)

###### ○ 발의자 및 발의일자

정세균의원 등 13인(2013.11.7)

( 강기정 김윤덕 김진표 노웅래 도종환 박기춘 박홍근 배재정 유기홍 윤관석 이원욱 전병헌 정세균 )

###### ○ 입법내용

개정 법률의 시행 전부터 겸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도 겸직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신설).

